

# 인 사 말

국회의원 김기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심각성은 집값하락에 따른 상환위험 증가로 이어지면서,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청년창업, 장년창업 실패 등으로 ‘자영업푸어’, 이외에도 ‘에듀푸어’, ‘메디푸어’ 등 각종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가계부채가 우리사회에서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소득의 정체와 가계부채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빚을 갚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열띤 토론 통해 실질적인 대안들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토론회를 위해 준비하여 주신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채무연석회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서창호

2015년 가계 부채의 상환능력은 갈수록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가계부채 1130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권여당에서부터 가계부채의 문제는 한국사회는 회복불능의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3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과 같은 자산매입을 위해 생긴 부채가 있고, 앞서 이야기 했듯 생활유지를 위해 부득이 하게 저야만 했던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택, 교육, 의료, 양육 등등, 흔히 재생산 영역이라 일컬어지는 영역에 가계부채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주택이라는 자산이 있으니 역대 빚을 저도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담보물을 잡고 있는 은행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일 뿐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하나 뿐인 주택을 팔아야 하는 ‘하우스푸어’에게는 정말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아주 절박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 영역에서 벌어지는 삶의 위기는 바로 가계부채 위기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런 가계부채가 내수부양의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이 자금을 조달하여 생산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부채-자산 경제’가 일반화 된 오늘날, 세상은 기업과 가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자기 소득의 몇 십 배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가계가 돈을 빌려 실물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130조원이라는 돈이 장롱 속에 숨겨져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자금수요의 주된 주체는 기업에서 가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생산의 위기와 가계부채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재생산 영역에서의 비용증가는 가계부채로 곧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로 인한 부담은 모든 우리 삶의 여유를 박탈시킵니다. 자산

가격을 유지시키는데 모두가 몰두하도록 만들고, 자산이 없는 사람에겐 자신을 몸을 고갈시켜 가면서까지 부채에 목을 매게 만듭니다. 빚을 계속 지도록 만드는 구조가 온존하는 한, 빚을 갚거나 유지하는 것만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채-자산 경제’가 일으키는 부채의 확대재생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금융피해자(금융채무자)를 양산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들과 해결과제들을 짚어보고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인 사 말

조 윤 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3분기중 가계부채는 1,166조원으로 올해안에 1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속도 역시 여전히 빨라 불과 1년전보다 무려 109조6000억원(10.4%)가 증가했으며, 분기 기준으로도 2015년 2분기말에 비해 34조5000억원이 늘어나 분기기준 증가 폭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채는 5,993만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중 71.8%는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고, 이로 해서 이들중 79.5%가 금융비용으로 인해 저축 및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금융부채를 지고 있는 1,090만5000가구 중에서 10.3%인 112만2000가구가 '위험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위험가구는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많고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 가구가 지고 있는 위험부채는 143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1%, 2%, 3% 오르면 위험가구도 122만1000가구, 138만5000가구, 152만7000가구로 늘어나고 위험부채도 그 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문제에는 가계 스스로 부채를 키운 측면보다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시행된 신용확장,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으로 사용된 금융정책, 복지정책으로 포장된 서민금융, 그리고 무엇보다 가계가 빚을 얻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까지 대출을 해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수취하고, 상환능력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채권을 재판매하고 추심하는 약탈적 금융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의 가계부채 문제는 비단 특정한 연령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20대는 학자금대출과

청년실업, 30대는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대출로 40~50대는 자영업대출, 하우스푸어 60대 이상은 OECD 1위의 노인빈곤율로 인한 생계형 대출로 모든 연령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피해자의 재기의 길 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적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최대 8년동안 원금을 다 갚게 해 중도탈락자가 속출하는 등 채무자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패자부활’을 위해 만들어진 파산제도는 파산관재인 선임 등으로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제도는 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전 국민의 10명중 7명이 크고 작은 빚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을 너무나 힘겹게 만들어 버린 사회, 차갑게 외면해버리는 사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누군가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와 함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각 전문가 분들의 깊이 있는 토론과 대안을 기대하면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에서도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및 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발제문

# 내수부양의 희생양이 된 ‘푸어족’과 사회재생산의 위기

송명관

### 1. 가계부채 내수부양의 주춧돌인가? 희생양인가?

가계부채 1100조 시대. 이제 가계부채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으로 부각된 지도 이미 5년이 넘었다.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2010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고 건설사 미분양이 폭증하면서, 정부기관을 비롯한 여러 민간연구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기 시작했었다.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회화된 것도 그 당시부터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대부분은 낮은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거나 만기상환을 연장해주는 것 정도였다. 그리고 가계부채위기 속에서도 내수부양을 위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계속되었고, 소위 싸게 돈을 빌려주는 각종 대출 복지(?) 제도가 선을 보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400조 가량 증가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전 세계 선진국 국가들에서 민간부채가 축소 국면에 들어갔었던 것과 대비된다. 결국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정부도 지난 여름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애써 살려놓은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고 이것이 내수침체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채가 많아도 걱정, 줄어도 걱정인 세상. 모두가 부채증가를 염려하는데, 왜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만 갈까? 이제 이것을 개인들의 욕망이나 재무관리의 미성숙 등으로 치부할 순 없다. 왜 우리사회가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문제해결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1-1. 97년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자금수요의 거대한 전환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신용화폐로서 은행의 대출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은행 밖에 없다. 그런데 은행은 아주 특별한 규칙에 의해서만 돈을 만들어낸다. 바로 누군가의 부채를 통해서만 돈을 만든다는 점이다. 그래서 누군가 부채를 일으켜 자금을 조달해야 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사회전체로 흘러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다. 보통 경제교과서에서는 기업이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이것을 생산활동에 투자하면서 돈은 사회로 흐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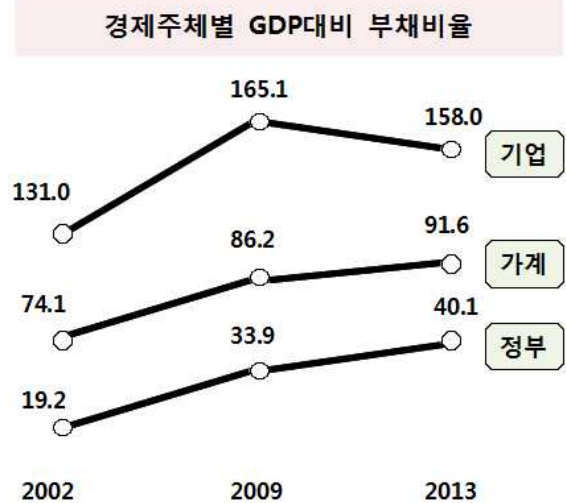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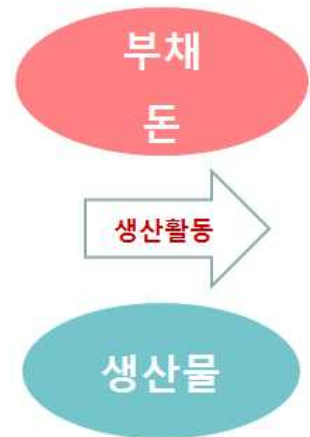
그래서 부채증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만큼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부채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인해 더 왕성한 생산과 더 많은 분배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시경제의 주요 주체별 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 시대에 부채와 돈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그림은 한국경제 지난 십여 년 동안의 부채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보다시피 기업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가계와 정부의 부채비율은 십년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했다.(덧붙이면 현재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50% 가까이 늘어난 상태이다.) 이것은 한국경제에서 자금수요의 비중이 기업에서 가계와 정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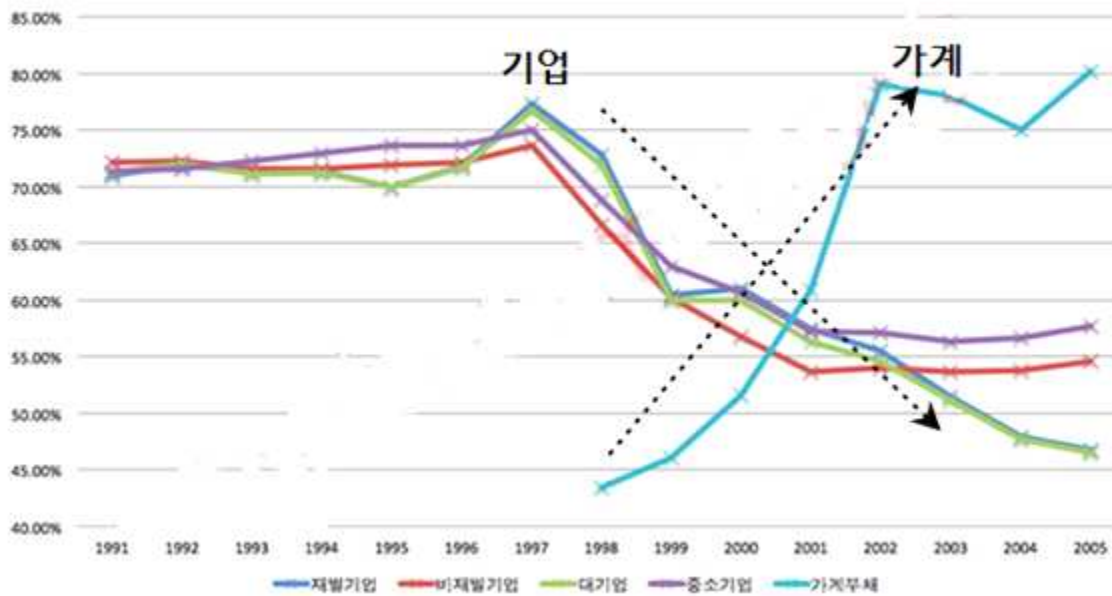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자금수요의 반전된 경향의 시작점은 97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음 그림은 총자산대비 부채비율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데 주력했다.<sup>1)</sup> 반면 가계는 자산에 비해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



자료: 한국은행

1) 97년 외환위기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은 재무건전성의 새로운 지표로 'BIS 자기자본비율(총부채/위험가중자산)과 부채비율 200%'라는 금융적 척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금융 건전성이 구조조정의 핵심사안으로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산업발전의 논리나 고용과 임금은 '부채비율의 감소'를 위해 부차화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은 신기술에 투자하거나 산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업건전성 향상에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시 기업들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도, 고용창출도 없이 현금을 확보하느라 혈안이 되었다. 또한 은행은 더 이상 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계도 줄어든 수입과 미래의 불안이 엄습해오면서 최대한 지출을 자제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 <97년 외환위기 전후 기업과 가게의 부채비율(부채/총자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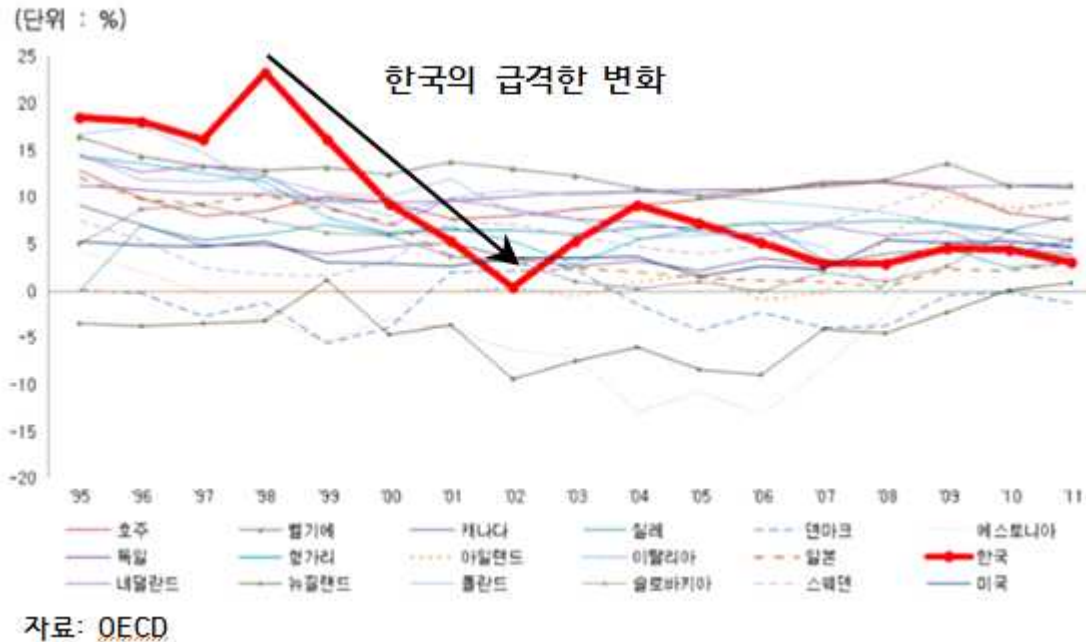
자료: 이병기(2008),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 한국경제연구연보보고서 / 조현수(2002), <버블붕괴현상의 위험성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 Pyeongteak Review Vol 16./OECD Statistics/재인용: <http://chshin.com/blog2/index.php/archives/707>

### <가게 및 기업 저축률의 변화>



자료: 한국은행

### <개인 순저축률 국제비교>



#### 1-2. DJ정부의 내수진작 종합대책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건 정책개입에 따라 경제구조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은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이 채무축소과정에 몰두하면서 투자와 고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국면이었다. 이에 정부는 내수를 부양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방법은 정부투자를 늘리거나 민간소비를 늘리는 것 뿐 이었다. 정부는 부실은행 정리를 위해 16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98년에 한해 벤처육성을 위해 1.2조원(집권 5년 동안 투여한 정책자금지원, 보증지원 총 11조원)을 투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했다. 민간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가계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추가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98년 9월의 ‘내수진작 종합대책’이다. 이것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금융을 확대해 돈을 풀어 소비를 부추김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이었다. 그 방안으로 신용카드의 수수료 인하와 인출한도 확대, 주택이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이용되는 할부금융의 금리인하, 주택자금대출 확대 등이었다.

이것은 부의 재분배와 고용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회보장 정책이 아니었다. 개인에게 신용카드를 쥐어주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며 경기부양의 책임을 가계에 전가하는 방법이었다. 고용불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사회안전망은 취약한 상황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중심의 신용카드 확대 정책’은 신용불량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에 충분했다. 정부가 진행한 신용카드 활성화대책으로 카드의 발급과 사용 제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풀렸다. 그 중 핵심인 ‘현금서비스한도 폐지 조치’였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신용카드시장으로 재벌들이 몰려들었고 신용카드 발급은 과열경쟁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그 결과는 2003년 카드 대란으로 귀결되었다.<sup>2)</sup>

2)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수 1999년 1.8장 => 2002년 4.6장/ 신용카드 전체 발급 수 1999년 38,993장

### 1-3. ‘채무자’에서 ‘투자자’로 새롭게 호명된 경제주체, 그리고 “빛 권하는 사회”

그런데 이런 부양책은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 한국경제의 양상을 바꾸는 계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가계가 저축을 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이 그 돈을 조달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이젠 가계와 기업 가릴 것이 모두 투자자가 되었고,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자가 되었다. 오히려 기업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저축을 더욱 늘렸다.

그러는 가운데 은행은 기업 대출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출구로서 ‘개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저금리정책을 취했고, 이것은 이후 노무현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됐다.<sup>3)</sup> 오히려 당시 노무현 정권은 ‘동북아 금융허브론’에서 보듯,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한국경제의 변화를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다듬고자 자본시장 선진화로 밀고나가려고 했다.<sup>4)</sup>



저금리정책과 소비자금융 확대는 우리사회가 “빛 권하는 사회”로 변하는 정책적 계기였고,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과 맞물려 우리사회는 다시 한 번 부동산투기 열풍에 휩싸이게 된다. 그 부동산투기 열풍의 대부분은 가구당 수억대 빚을 지면서 쌓아올린 빚더미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심지어 재테크를 넘어서 “빚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당시 경제일간지 제목을 봐도 우리 사회가 빚을 지는 것과 투자를 동일시하게 되었다는 드러내준다.

**“빚 잘 굴리는 당신 부자되겠네요”      -한국경제 2006년 11월 5일**

이런 사회적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sup>5)</sup>

=> 2002년 104,807장/ 신용카드 사용액 1999년 90조 7천억원 => 2002년 622조 9천억원.

3) 당시 저금리정책으로의 전환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0년 들어 주식시장의 IT버블이 꺼지면서 경기가 급랭하자 새로운 부양책이 필요했었다. 더군다나 2001년 911 테러까지 터진 상태에서, 특단의 부양책을 취하는데 “빛의 평등화”라고 일컬어지는 소비자금융의 대대적인 확대였다. 이에 발맞춰 미국 중앙은행은 1%대 초저금리 정책을 취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가 알다시피 극심한 부동산 거품을 불러들였고, 이에 연동된 각종 파생금융상품들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주범이 되는 배경을 만들게 된다.

4) 이런 신자유주의적 부채-자산 경제의 등장은 한국만의 경향이 아니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8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한국은 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계기를 통해 뒤늦게 이식되었다.

5) 2004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투기열풍은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투자자로서 새로운 사회적 규정은 각종 금융자산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고, 누구나 펀드계좌 하나쯤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펀드

빚더미 서민도 2억 주택 구매 가능? ... 똑똑한 '빚테크' 노하우 - SBS 2011년 10월 11일

불타는 증시... "빚내서라도 올라 탈래", 코스피 2200 넘나들자 '빚테크' 늘어 - 조선경제 2011월 5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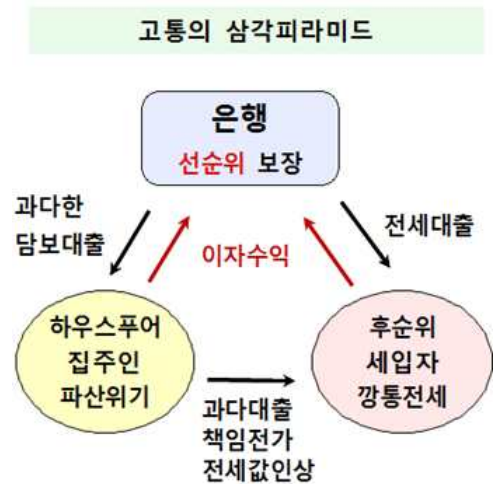
이처럼 “빚 권하는 사회”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어느 정부를 가릴 것 없이 진행되었었다. 이것은 지난 17년간의 내수부양의 버팀목이 바로 ‘가계부채’였다는 점을 가리킨다. 자금조달로 인해 부채가 늘어나도 자산가격만 상승할 수 있다면 부채증가는 문제될 게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조달능력을 ‘빚테크’라 칭송했다. 마치 개인도 이젠 기업처럼 자금을 조달해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는 주체로 변모한 것이다. 채무자인 동시에 투자자가 된 것이다.<sup>6)</sup>

#### 1-4. ‘투자자’에서 ‘푸어족’으로, 재생산의 위기

그러나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진 않았다. 한국도 미국처럼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빚테크의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우스푸어’가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리고 ‘하우스푸어’ 문제는 ‘역전세’, ‘깡통주택’<sup>7)</sup>, ‘깡통전세’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 불똥은 전세금을 날린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게까지 번지게 되었다. 실제 배당순위에 밀려 전세금 1억 3000만원을 모두 날린 사연 등이 뉴스에 종종 소개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자 MB정부는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모든 내수부양책들을 맞추게 된다. 여기에 세금감면은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대책들이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2014년 급기야 부동산 대출을 늘리기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시켰고, 전세대책은 집을 싸게 구매하는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초저금리 정책 환경에 따라 한국은행도 1.75%까지 금리를 낮춤으로서 정책보조를 같이 하게 된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정책과 MBS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세수요자들을 주택매매시장으로 인입시킬 수 있는 금융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여기에 저금리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전세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수요자들이 전세대출을 늘리거나 주택매매를 선택함으로써 가계대출이 증

계좌 수는 2003년 말 361만 개에서 2006년 1월 1천만 개를 넘었고,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발한 2007년 10월에 2천만 개를 돌파했으며,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인 2008년 6월에는 2천500만 개로 최고점에 이르렀다.

6) 이제 가계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개개인 하나하나까지 자신의 생활양식에서 투자자로서의 역할과 규율을 체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은 채무자인 동시에 투자자가 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신의 모자람을 느낄 때마다 자기 개발과 자기 경영에 몰두하게 되어 “자신의 일을 관리하고 자신의 미래를 돌보는 이상적 존재 모형”(주제화)이 되는 셈이다.

7) 집값이 은행대출과 같아져 버린 상태, 집을 경매로 팔고 난 후 은행대출을 갚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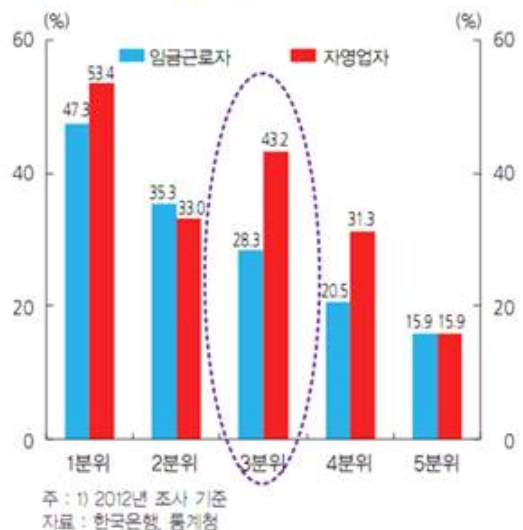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다시 내수부양의 효과로 주택시장을 자극시켰고, 2015년 올해 90년 이후 가장 많은 70만호에 이르는 주택분양 물량을 쏟아냈다. 결국 다시 한 번 가계가 내수부양의 버팀목으로 동원된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는 주택이라는 물질적 자산이 존재한다. 하지만 주택은 자신이 거주하는 한, 임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감가상각이 이뤄져 소비되는 재화다. 그래서 부채 상황을 위해선 다른 소득원이 계속 필요하다. 주거안정과 역대 빚을 비교했을 때,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안정적인 대출상환의 여건들(일자리와 소득)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한편, 내수부양의 버팀목이 되는 가계는 주택에만 등장하지 않다. 사실 문제는 더 심각한 부채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푸어’에 있다.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중심으로 부채의 위험이 높아졌었다. 부채양상도 주택구매 뿐만 아니라 생활자금과 생계형 사업자금으로도 확대되었다. 그리고 자금조달 기관도 금리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생계형 ‘자영업푸어’가 양산되는 건, 그동안 투자자로 호명되었던 가계가 점차 한계기업처럼 되고 있는 걸 보여준다. 결국 가계가 낮은 생산성 속에서 기업의 투자공백을 근근이 빚으로 메우는 것이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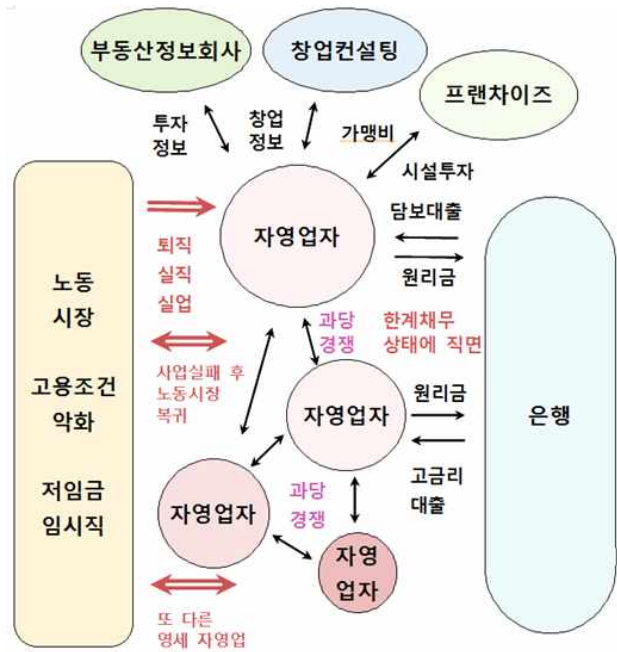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소득분위별 非은행권 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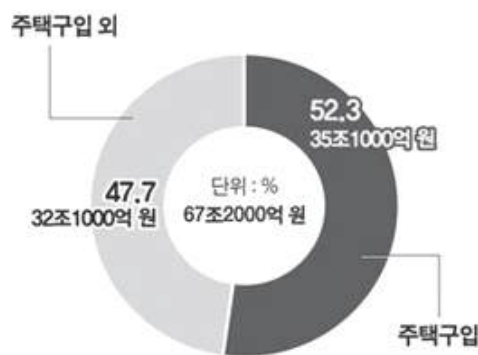
그러나 ‘자영업푸어’ 대부분은 퇴직, 실직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탈락한 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이다. 그래서 ‘자영업푸어’의 문제는 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경우, 과당 과밀경쟁으로 인해 수입은 떨어지는데,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년을 못 넘기는 자영업자가 70%에 이르는 형국이다.

이렇게 내수부양을 위해 희생된 이들은 대출상환을 위한 소득부족과 고정경비 지출확대를 감당하기 못해 재생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것은 주택담보대출 용도가 주택구입이 아닌 대출 상환과 생계자금 마련에 사용된다는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8)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서 전체의 30.9%에 달한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24.3%), 농업어업(18.6%). 자영업자들의 연간 평균소득은 2012년 기준 3,472만원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3,563만원)보다 적다. 남성의 연간소득(3,981만원)이 여성(2,313만원)보다 약 1.7배 높고, 연령별로는 40~49세가 4,159만원으로 60세 이상의 평균소득(2,032만원)보다 2배 정도 많고, 30세 미만은 1,773만원으로 전체 평균(2,897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대출규모는 임금근로자보다 월등히 높다. 자영업자 차주 1인당 대출규모는 1억1,700만원. 이는 임금근로자 1인당 대출규모인 3,800만원의 세 배에 달하는 수준. - 통계청, KB금융지주연구소



자금용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주택구입 외 주택담보대출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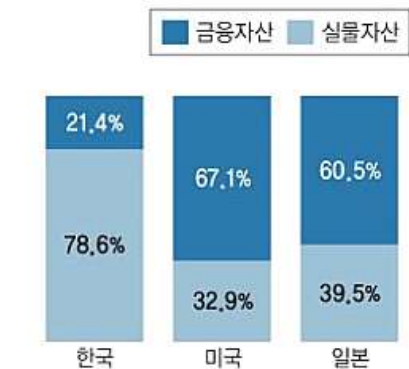


<출처 : 국제신문, 2014.10.14. "주택담보대출47% '집 안 샀다.'">

한국의 가계자산의 80%가 실물, 즉 주택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다른 소득재원이 없는 한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인 경우 집을 팔아서 빚을 갚을 선택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선 다시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빚을 내야만 한다. 이런 한국의 자산분포현황은 다른 선진국들과 매우 다른 것으로서, 이들에 비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우리가 직면한 가계부채 위기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신자유주의적 부채-자산 경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위기에서 위기대응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담보자산의 유무, 자산가격의 수준에 따라 가계가 처한 재생산 위기는 시간차를 두고 확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기댄 재생산구조는 자산가격의 변동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계실질소득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가계는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한 투자자가 되길 요구받고 있다. 이런 결과 기

가계자산중 실물·금융자산 비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출처: 세계일보 2011.8.29.

업의 투자회피와 부채축소로 인해 생긴 내수부양의 빈자리를 가계가 낮은 생산성과 고비용구조 속에서 십여 년 째 이를 메우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 2. 약탈적 대출과 빈곤비즈니스 - 빚으로 빈곤을 해결하라?

### 2-1. 빈곤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과 빈곤비즈니스

한편 이렇게 자산투자에 실패한 ‘푸어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이고 세대별로는 50대, 중산층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10%의 빈곤계층의 가계부채는 실제 그들의 생존이 빚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체 1,788만 가구 중 412만 가구가 저소득층이고, 412만 가구 중 156만 가구가 금융대출이 있는 상황이다.<sup>9)</sup> 이중의 절반은 연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의 대출 잔액에 연 가처분소득의 8배 이상<sup>10)</sup>인 상황이다.

이러한 빈곤계층의 가계부채문제의 시작은 97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량의 실직과 비정규직의 증가는 이른바 ‘노동하는 빈곤층’(working-poor)을 대대적으로 양산했다. 물론 워킹푸어의 등장이 곧바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개인의 신용에 맞춰지면서, 빚으로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처럼 이미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신용불량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현물구매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현금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은 생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용이 주를 이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빈곤한 서민들은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한 임금하락을 현금서비스로 보충하며 경제위기를 견뎌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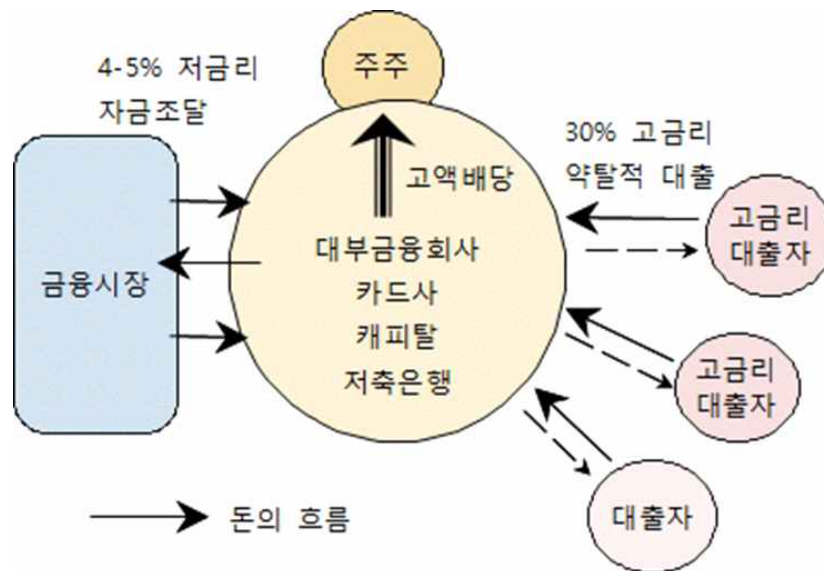
이제 ‘푸어족’이라는 말은 신조어를 만드는 제조기가 되었다. 학자금대출로 고통 받는 ‘에듀푸어’, 결혼을 빚을 시작하는 ‘웨딩푸어’, 수년간 벌어진 전세금등으로 인해 전세대출을 상시적으로 끼고 살 수 밖에 없는 ‘전세푸어’ 까지 등장했다. 가히 ‘푸어족’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이제 삶의 모든 영역이 빚으로 메워야 재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사회에 ‘약탈적 대출’이라는 사회악을 만들었다. 영화 ‘화차’와 드라마 ‘전의 전쟁’ 등이 대중적 관심을 받은 것도 이런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종 대부업체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을 통해 이뤄지는 약탈적 대출은 워킹푸어를 계속 빈곤에 머무르게 만든다. 여기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는 하루에 수 십 번씩 도배되는 이들의 TV 광고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이들은 금융시장에서 저금리로 싸게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시장에서 20-30%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사업을 벌인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몇몇 대표적인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주주배당지급액이 5조원에 이른다.<sup>11)</sup>

9)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0)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1) 제1금융권까지 포함하면 배당지급액은 20조원에 이른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솔로몬, 한국, 진흥, 제일 저축은행/ 신한카드(LG카드포함),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신한캐피탈, 롯데캐피탈, 아주캐피탈)



이러한 약탈적 대출의 경향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가계부채를 염려하면서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것은 개인들의 능력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사회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에게 취해야할 사회보장사업은 저소득층 대출프로그램으로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러다 보니 채무자들도 싸게 돈을 빌리는 것이 일종의 복지라는 인식까지 갖게 되었다. ‘국민행복기금’이나 ‘햇살론’ 등의 형태로 일종의 빈곤비즈니스를 형성하고 있다. 빈곤비즈니스란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닌, 빈곤을 고정화하는 비즈니스”<sup>12)</sup>를 말한다.

이렇게 십여 년 간 이어진 약탈적 대출과 빈곤비즈니스는 우리 사회에서 내수경제를 한 쪽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빌린 대출금의 대부분은 생계를 위한 소비로서 내수 경제에 흘러 다니고 있고, 대출상환을 위해 이들 대부분이 하루도 쉼 없이 벌이고 있는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서비스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 2-2. 재생산의 위기 - 청년부채, 노년부채

그런데 이러한 약탈적 대출과 빈곤비즈니스의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생산동력을 갉아먹는다는데 있다. 아무리 노력해서 빛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누구든 건실한 삶을 포기하려 들 것이다. 최근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는 것은 이런 삶의 전망을 포기하는 것이 일부 열악한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자신과 타인의 노동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진지한 성찰과 노력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도록 만드는 상태에서는 사회재생산 구조가 하나 둘씩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이 그 위험성을 지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재생산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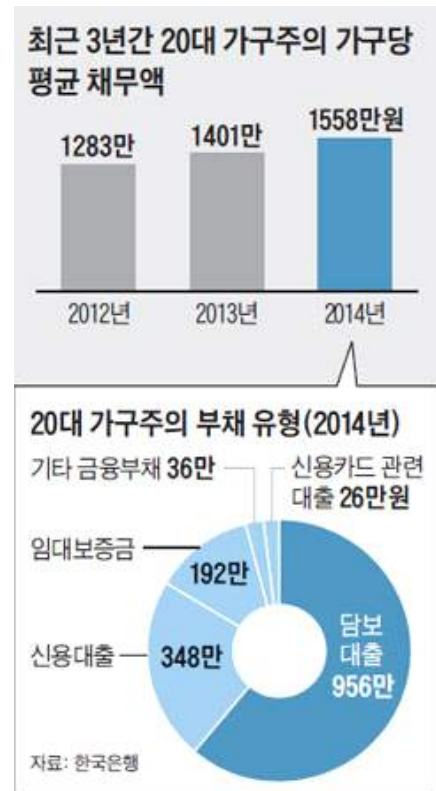
12) <홈리스뉴스 12호> “요세바 통신-빈곤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2012.04.30.

과 유럽의 몇몇 선진국들의 경우 청년세대의 좌절이 IS에 동조하는 극단적 종교주의와 문지마 총기 난사와 같은 외톨이형 범죄 등으로 표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도 청년세대의 좌절과 재생산 위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청년부채”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부채위기 계층에 청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첨언하면, 청년창업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도 다른 한편에서 보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고통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용회복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회복위에서 채무 조정에 들어간 사람의 약 10%가 20대(약 4만2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채무 조정 신청자의 대부분은 대학생들이었다. 이젠 빚 때문에 학교를 잠시 쉰다는 말이 별 이상하지 않은 얘기가 되어 버렸다. ‘대학생 대출’이라고 인터넷 검색만 해도 대출상담 사이트가 줄줄이 뜬다. 100만 원당 한 달에 2만~3만원 이자(월 금리 2~3%)정도인데, 연 금리로는 24~36%에 해당하는 고금리이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부채는 부채의 절대적인 크기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2013년 대비 30세 미만 청년이 11.2%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30~39세 청년들 또한 7% 늘어났다. 이는 청년의 삶이 대출을 늘리지 않고서는 점점 살아가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



출처: 조선비즈 2015.0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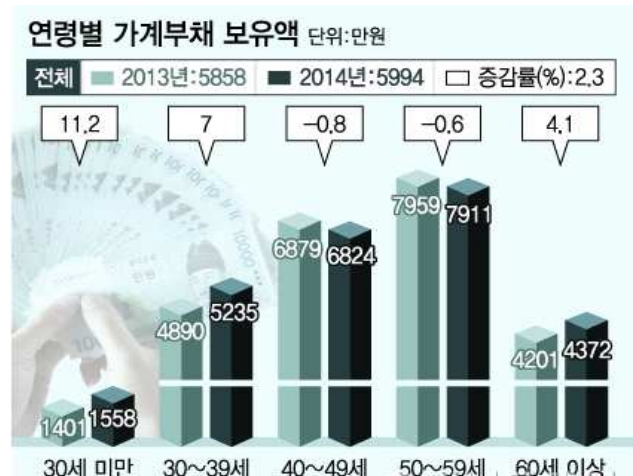
청년들에게 가장 큰 빚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학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생계비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있다.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주거비 부담이 평균 347만원으로 다른 계층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비의 특성상 줄일 수 없는 항목이다. 다른 항목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소비지출을 보이고 있다.

<소비지출 평균 및 증감률 (단위 : 만원, %)>

구 분		평 균								증감률
		소비지출1)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	
가구주 연령대별	30세미만	1,758	489	347	83*	76	193	172	399	1,560
	30~39세	2,350	690	315	244	126	283	188	505	2,160
	40~49세	2,910	758	337	639	136	328	218	494	2,640
	50~59세	2,703	693	339	431	159	339	220	522	2,394
	60세이상	1,414	440	226	46	169	151	86	295	1,059

주 : 1) 소비지출은 복지부문 조사결과임, 출처: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 조사, 통계청, 2014

한편 청년보다 부채비율 높은 노인계층의 부채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은 이미 생애주기 동안 벌어들인 자산을 모두 소진한 상태라서 상환능력도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KDI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61%(전 연령층 128%)로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 구조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연령층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곳은 비교 가능한 주요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고령층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의미다.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출처: 머니투데이 2015.11.18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이라는 자산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과 같은 자산유동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노인빈곤층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은퇴 이후에도 소득보전을 위해 노동시장에 문을 두드리게 된다. 가구 소득 중 연금 및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반면 독일과 네덜란드의 관련 비율은 70%를 상회한다.) 노인빈곤률 50%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힘든 압도적인 수치이다.<sup>13)</sup>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 세대간 불평등을 강조하는 담론들, 가령 노인층이 청년들의 소득창출을 막고 있다는 식의 선전은 우리사회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다. 부채위기를 비롯한 삶의 재생산 위기는 전체 모든 계층에게 드러나는 현상이며, 저소득층, 자영업자, 실직자 등에 더욱 가중되어 있다. 노년 부채의 증가 원인도 자식교육비와 퇴직 및 실직 후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어 생겨난 부채가 상당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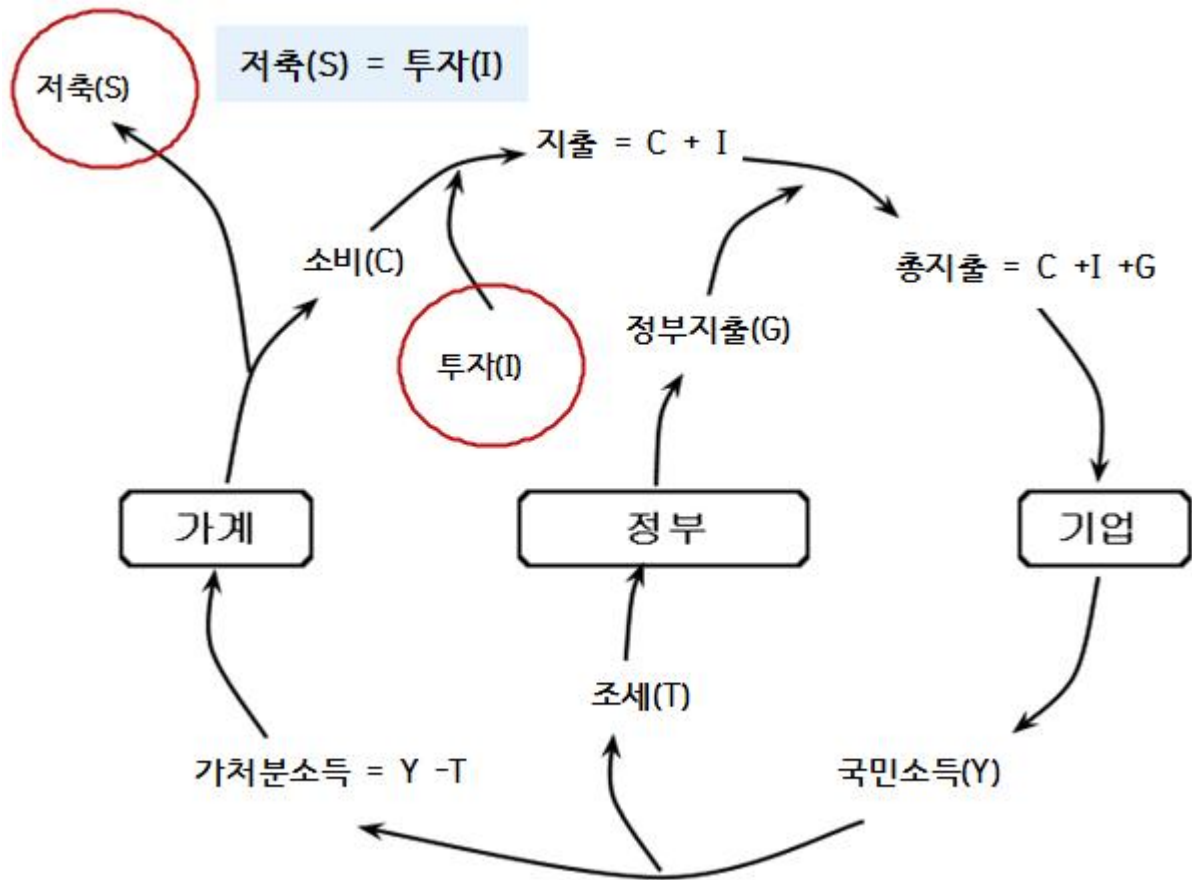
### 3. 가계부채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모색

#### 3-1. 대안적 사고를 위한 출발점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책들도 무수히 많이 나왔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내수부양의 빈자리를 가계가 낮은 생산성과 고비용 구조 속에서 계속 메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선 부채위기의 해결은 요원하다.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경제 항등식이라 불리는 국민총소득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Y(\text{국민총소득}) = C(\text{소비}) + I(\text{투자}) + G(\text{정부지출}) + (X-m)(\text{순수출})$$

13) OECD는 12월 1일 배포한 34개 회원국의 연금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인 <2015년도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 at a Glance 2015)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0%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3%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위 그림은 국민경제 3대 주체를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순환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 순환이 순조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같다고 가정한다. 보통 가게가 저축한 돈을 기업이 빌려서 생산으로 투자한다고 보는 것이다. 은행은 이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경영의 일반형태는 차입경영이기에, 기업이 가장 큰 자금수요자임 셈이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비율도 기업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발생하면 기업은 부도위기에 몰리기 때문에 차입경영을 축소하고 부채관리에 들어간다.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97년 외환위기 상황이 그러했다. 2008년 금융위기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정부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 불황국면을 반전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그 경기부양책으로 총지출이 다시 늘어나면, 그림에서 보듯 그 수혜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먼저 가져간다. 문제는 기업이 그 이익을 다시 재분배하기 위해 즉각적인 투자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경기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채 관리를 위한 현금 쌓기에 몰두한다. 신규투자는 물론이거니와 기존 설비의 가동률도 떨어뜨리고 인력도 감축한다. 그렇게 되면 수 년 동안 실물경기의 불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상황이 고착화되면 소위 장기불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불황’이라는 것이 이것을 말한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DJ정부도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통해 기업투자의 공백을 메웠다. 그리고 원화가치 하락으로 회복된 수출경쟁력으로 IMF 구제금융 조기탈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sup>14)</sup> 그러나 이렇게 수익성이 회복된 기업들은 여전히 자본시장 개방에 의해 도입된 국제금융규율체제에 의해 부채

14) 이는 2000년대 미중간 ‘수출달러 환류메커니즘’에 따른 글로벌 경기성장세 덕택이기도 하다.

관리에 몰두해야 했다, 그리하여 앞서 살펴봤던 저축률의 변화에서 보듯, 기업과 가계의 자금순환구조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기업의 저축률이 가계의 저축률보다 높아졌다.

그런데 이런 가계부채에 근거한 내수부양책이 지속되기 위해선 가계자산의 증가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2004년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 광풍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더군다나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위축된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선 다시 부동산 경기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경제에서 내수비중이 가장 큰 것이 바로 건설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나 행정수도건설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내수부양을 위한 커다란 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제 기업에서 가계로 자금순환의 손바뀜이 일어 난지 어언 18년이 가까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손바뀜으로 내수부양의 버팀목이 되어 왔던 가계는 이제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서부터 사내유보금 환수를 위한 ‘부자증세’까지,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은 문제해결의 초점을 기업에 맞추고 있다.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구축된 한국경제의 구조상 이들로부터 재분배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일면 타당한 분석이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도 기업들을 향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구매를 멈춘 적이 없었다. 기업총수의 특별사면도 언제나 그들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국민경제를 위해 내놓은 게 얼마나 될까? 97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고착화된 이후, 기업의 일반적인 투자행태는 유보이윤 이상을 투자하지 않게 되었다. 기업부채의 대부분도 기업의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금융자산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sup>15)</sup> 그리고 사내유보금 중 200조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 중에서 80%가 삼성, 현대를 비롯한 5대 재벌에게 몰려있다.

다시 앞의 거시경제 순환그림으로 되돌아 가보자. 기업과 가계 모두 현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부라는 주체에 대해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 무렵부터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담론 등이 대중적으로 주목 받았던 이유는 대중들이 더 이상 개인화된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더를 선점했던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경제민주화를 경제활성화와 부당대립시키고 있다. 여전히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과거의 오래된 인식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그리고 정부는 균형재정론에 기반한 최소한의 위기관리정책 만을

15) 통계상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 된 한국경제 특성상, 이런 경향은 부채 관리가 안정적이고 이윤이 많은 대기업에서 두드러진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운영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첨언하면 97년 이후 ‘이윤대비 순투자비율’은 뚝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세금, 이자, 배당을 지불하고 난 유보이윤 수준으로 투자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보통 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신규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존재한다. 하지만 97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질서 속에서 기업은 유보이윤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주체로 바뀌었다. 97년 이후 기업의 축적률(자본스톡 대비 순투자)은 유보이윤율(자본스톡 대비 지불 후 이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ROE(자기 자본 이익률) 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서 ROE는 자본스톡 및 채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마이너스 순부채를 고려한 것이다. 한국의 비금융법인의 순부채는 줄곧 증가하였지만, 인플레이션을 보정했을 때 2000년대 이전 ROE와 유보이윤율은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인플레이션 효과 및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ROE와 유보이윤율은 분기한다. ROE를 기준으로 할 때, 비금융법인 축적률은 ROE보다 높다. -김덕민, <신자유주의 위기와 세계경제>, 참세상 주례토론회 2015.10.26

다를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도 자인하는 바처럼 복지재정으로 들어가는 재정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자연증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다른 이유를 갖다 붙여도 한들, 실재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가계부채 만이 유일한 경기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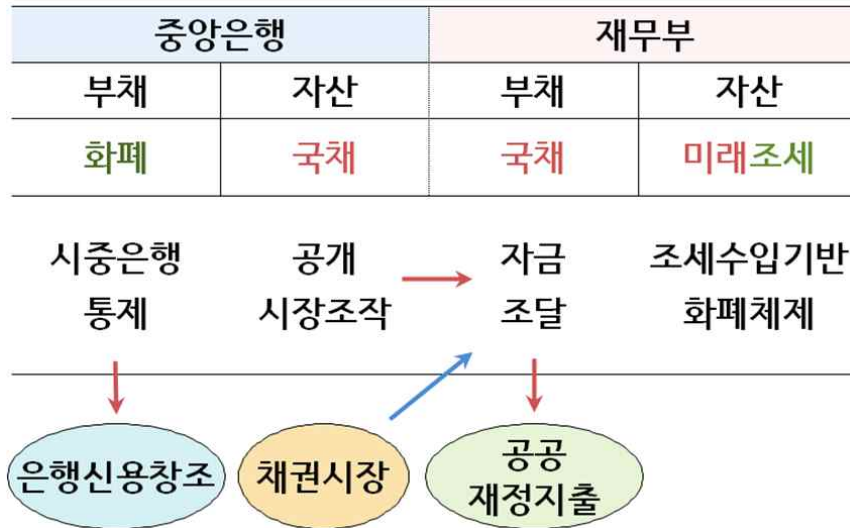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효율성’에만 집착했던 사고를 크게 전환시킬 시점에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생산의 토대마저 침식시키는 사회재생산의 위기 앞에서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릇이 계속 깨져나가면서 작아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가계부채 위기를 개인의 재무관리의 실패로 봐야할지, 신용위기의 잠재적 위험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침식되는 사회재생산의 위기로 봐야할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그 풍경이 달라진다. 우리는 가계부채 위기를 사회재생산의 위기로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젠 국가의 역할과 재정정책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직접 사회적 효용을 식별하고 공공투자를 이끄는 방식으로 부채문제에 대해 개입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생산과 분배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한다.<sup>16)</sup> 실제 국가는 거둬들인 세금만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해 보증되는 화폐는 미래에 창출할 부가가치를 담보로 만든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능에 의해 발권되는 화폐가 국가수중에 없다는 건 아무리 봐도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화폐체계의 토대를 지탱하는 국가가 재생산의 위기국면에서 자금수요의 주체이자 생산의 주체로 나서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 <참조: 현대자본주의 화폐체제>

---

16) 가령 복지재정을 논할 때 마다 등장하는 “재원은 어디서?”라는 말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 돈이 없는 걸까? 국부펀드 규모만 100조이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만 해도 400조 이다. 설령 이 돈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고정된 돈이라면, 공공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 국민연금 500조가 쌓여 있는데 이 돈을 국가가 30년 장기국채로 조달하는 건 어떨까? 주식시장의 출렁임에 따라 수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이 기금을 국가재정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미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가 100조 가량 된다. 국민연금의 성격이 노후보장기금이라면, 이것을 국가재정에 투자하여 더 나은 재생산체제를 사회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일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 했던 방식이다. 국내 연기금들이 일본국채의 주요한 매수자였고, 이 자금순환을 통해 일본은 20년 넘게 버텼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의 조달이 아니다. 조달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 4대강 사업처럼 토건재벌들한테 몰아주거나 사회적 효용은 불확실한 채 운영비용만 늘리고 있는 애물단지를 만들어선 곤란하다.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지었던 경기장, 박람회장, 전시물 등이 일회성 행사가 끝나고 지자체 재정을 쪼먹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목격하고 있다.



### 3-2.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식의 전면적인 개편 - 한국판 양적완화

이러한 국가재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 속에, 작금의 가계부채 위기 해법들을 모색해 보자. 이미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상환연장, 저금리 갈아타기, 담보비율 조정, 햇살론과 같은 대출복지서비스,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이다. 통합도산법과 같은 개인파산과 면책을 돕는 제도적 장치도 있다.<sup>17)</sup> 기업의 경우도 비슷하다. 최근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상시화하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관리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규모에 있어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모두 국가의 신용보증과 공적기관들의 기금을 담보로 하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문제해결의 초점을 여전히 개인책임에 의존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가 주된 운영기조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기업회생을 돕기도 한다. 그리고 그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 16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들어갔던 97년 외환위기 사태를 제외하고서도, 수많은 사례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부채위기 개입 사례를 엿볼 수 있다.<sup>18)</sup>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 대부분은 정부의 금융 감독체계에 있는 은행들이다. 산업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처럼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리되는 금융기관도 있다. 이러한 신용체계를 바탕으로 상황이 급박할 시 유사공적자금의 형태로도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

17) 지난 대선 공약 중에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제시된 여러 공약 중, 별제권 문제가 쟁점이 되어있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에 유리한 제도인데, 이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쪽은 1가구 1주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별제권 적용을 배제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빚 때문에 삶의 기본공간인 주택마저 상실해 주거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통합도산법에서는 개인의 파산 신청 이후 선고 직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회생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18) 지난 10월에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가 불거지자 산업은행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2003년 STX 부실사태 당시에도 STX 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2016년까지 2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유사 공적자금	구성규모	재원	용도
채권시장안정 펀드	10조원	2조원 산업은행 / 6조원 은행권 1조2천억원 생보업계 / 3천억원 손보업계 5천억원 증권사 (5조원은 한국은행이 출자금유기관에 RP 방식 으로 지원)	회사채 매입 통한 채권시장 경색 완화
은행자본확충 펀드	20조원	10조원 한국은행 차입금 / 2조원 산업은행 차 입금 / 8조원 유동화증권발행	은행 자본확충 지원
구조조정기금	40조원	금융기관출연금 / 캠프 전입금 정부 출연금 / 정부보증채권 한국은행 차입금 등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 입 및 기업의 구조조 정 대상 자산 매입 등
금융안정기금	미정	금융기관출연금 / 기업 출연금 정부보증채권 / 정부, 한국은행 등 차입금 정책금융공사 수입금 등	BIS 비율 8%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합 계	70조원 이상		

출처: 경제개혁연대(2009.3.25.)<경제개혁연대, 정부의 금융위기 관련 지원대책 자금규모 총  
액 조사 결과 발표>

이뿐만 아니다. 작년엔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채권매입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것은 안심전환 대출과 같은 주택대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90조에 이르는 MBS 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은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4000억 원을 추가 출자해서 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할 여력을 만들고, 추가 발행된 MBS를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바탕으로 주택금융공사에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대책구조’라 부르기도 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 20조원 규모의 ‘금융중개 지원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19)</sup>



출처: 한국경제 2014.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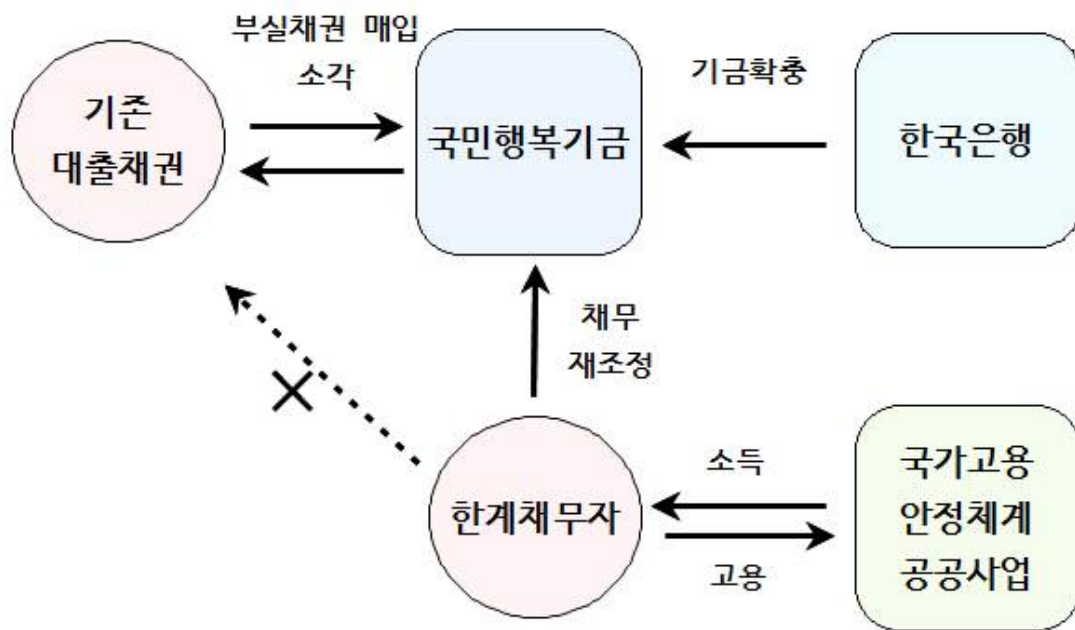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도 가계부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기업들에 대한 지원 사례와 비교할 때, 그 규모도 매우 초라하고 운영방식도 저신용자들의 재생산위기를 지원하기 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행복기금이 이들 채권을 원금의 3%~5%에 사온 뒤 채무자로부터 원금의 50%를 받아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과연 채무자의 삶의 회복을 돕기 위한 기관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20년 전 보증인들에게 까지 채권추심을 일삼아 많은 지

19)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15조→20조원 확대, 연합뉴스, 2015.03.26

탄을 받고 있다.<sup>20)</sup>

이제 이렇게 설립목적과 괴리되어 운영되는 국민행복기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금 규모가 너무 작다. 부실기업 채권을 매입하고, MBS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했던 수준 정도의 절반만이라도 투여해보자. 앞서 기업들에게 해줬던 사례들처럼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은 국채, 정부보증채, MBS가 있다.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기금을 확충하고 다시 한국은행이 이 국채를 매입하면 된다. 일종의 ‘한국판 양적완화’라 할 수 있다.<sup>21)</sup>

이 돈으로 액면가보다 훨씬 낮게 매입한 기존 부실대출채권을 모두 소각시키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채무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 가령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임금의 일부를 조정된 채무를 갚는 방식도 있다. 일을 해야 빚을 갚을 소득이 생겨나므로, 가계부채 대응책은 고용정책과 함께 맞물릴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사업은 매우 많다. 허드레 일만 맡기는 형식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고용형태로 사회적 효용을 창출할 공공근로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20) 국민‘불행’기금 된 국민행복기금, 경향신문 .2015.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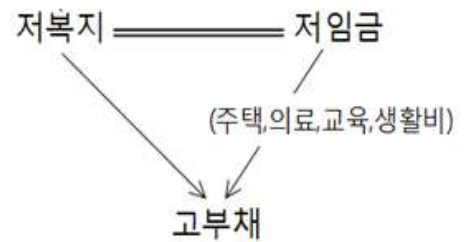
21)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지난 여름 대외경제연구원장을 통해 이슈화된 바 있다. “내수 진작 위해 ‘양적완화’ 필요”, 이일형 대외경제연구원장 주장 “기준금리 조정 정책으로 한계 중소기업·가계 빚 탕감해줘서 국내 소비와 투자 자극하자” ‘국채 발행 뒤 한은이 매입’ 제안. 이 원장은 매입 대상 채권으로 중소기업 대출(10조1000억원)과 은행권 가계대출(3조1000억원), 제2금융권 부실 채권(14조1000억원), 햇살론 등 서민대출채권(12조4000억원)과 현재는 정상 채권이나 부실 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채권(19조3000억원) 등 모두 60조5000억원 규모를 거론했다. 이 원장은 “한은이 직접 부실 채권을 사들여도 되지만, 정부가 부실 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15.07.08.

한편 일부에선 이런 방법에 대해 통화량 증가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을 지적할 수도 있으나, 그건 기우라 할 수 있다. 현재 3년물 금채금리는 1.7%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는 시중유동성이 매우 풍부하다는 걸 방증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행은 160조원에 이르는 통화안정채권을 운영 중에 있다. 통화량 조절을 위해 이 방법으로 활용하면 된다.

### 3-3. 재생산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전환 - 국가 복지체계 및 고용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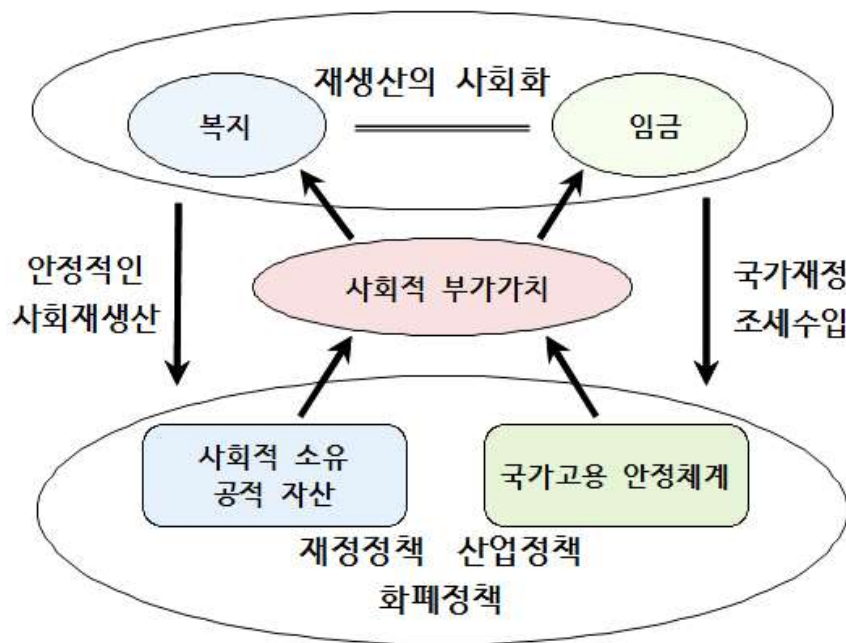
대공황 이후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역할은 화폐관리와 더불어 노동력 관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장기 실업 사태를 해결하고 생산기반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공공사업을 늘렸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가복지체계를 설계하여 사회재생산을 복원시키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역사적 경험에 비추보면,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가계 부채위기는 한편에서는 소득부족의 원인도 있지만, 열악한 복지체계 속에서 가계가 감당해야할 영역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sup>22)</sup>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한계채무자들의 부채 위기는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부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저복지로 인한 재생산체계의 위기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열악한 복지와 생계형 부채의 관계

이러한 복지체계를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재생산의 사회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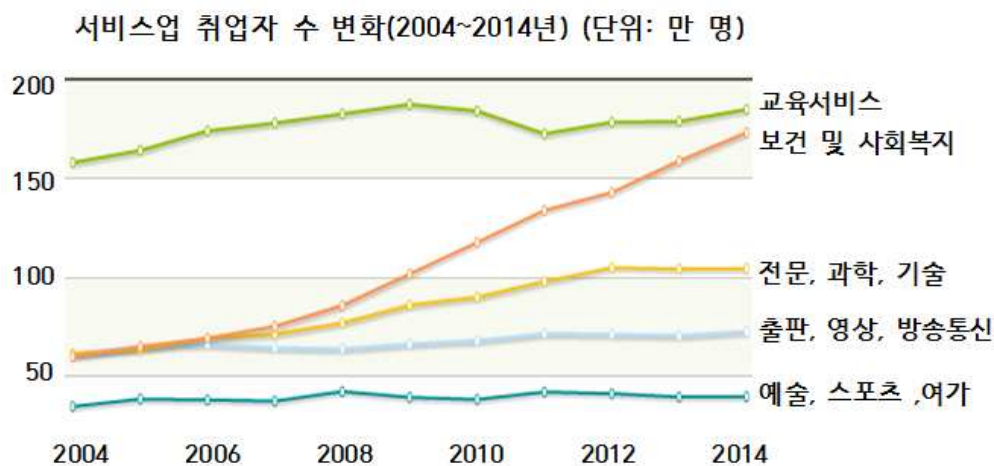
그 시작은 국가의 재정정책과 산업정책<sup>23)</sup>을 재활성화 하여, 사회적 소유에 기반한 공적자산을 늘리

22) 그래서 가계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략은 자산형성을 통해 낮은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 국가는 가계의 자산형성을 돕는 세금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내수정책을 취함으로써 이에 일조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산형성 지원정책이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가계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자산가격을 구매하기 위해선 높은 부채를 질 수 밖에 없고, 높은 부채를 통해 자산을 구매한 가계는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MB 정부 뿐 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취했던 방식은 연착륙이라는 명분으로 자산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이었다.

23) 산업정책은 전통적으로 시장실패를 명분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원배분에 간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산업정책의 개념을 실물경제의 잠재성장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 정책으로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 제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재로서 산업인프라 확대를 추구

고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안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로부터 재생산을 사회화시킬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화 된 재생산체제는 안정적인 사회재생산과 국가재정의 미래조세를 뒷받침할 토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산업정책의 시작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다음 그림은 취업자 수를 통해 바라본 주요산업 영역의 변화이다. 지난 10년간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변화 중 가장 커다란 증가세를 보이는 건 단연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종이다. 서비스업의 제외한 다른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취업자 수 변동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종이 전 산업을 통틀어 가장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큰 업종일 것이다.



자료: 통계청 KOSIS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은, 이런 추세로 볼 때 가장 고용효과가 큰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한국사회 산업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 서비스시장 발전계획안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었고, 삼성과 같은 재벌대기업이 노리고 있는 다음 ‘먹거리’가 여기서 나올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은 바로 이것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sup>24)</sup>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사회재생산 구조에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을 누군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해결했었던 이것이 더 이상 개별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 산업의 특성상 공적기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유지해야할 주체가 반드시

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정책은 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GDP목표와 같은 숫자제시형 정책이 아니라 가치지향적 산업정책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GDP 성장은 사회적 후생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가치지향적 경제사회발전의 개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GDP(GDP+소득분배+삶의 질+환경 등)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4) 서비스시장 확대와 이에 연동된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는 2013년에 나온 맥킨지 한국 2차 성장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있는 바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 보고서는 낮은 생산성 영역에 초과 공급된 민간서비스 인력을 생산성 높고 노동인력이 부족한 의료보건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지방 순회 토론을 하던 중 어느 발제자가 “생계형 서비스업 퇴출전략”이라는 말을 꺼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던 사건이 있었다. (대통령 직속기관, “생계형 서비스 업종 퇴출 전략 추진해야”... 파문 예상 - 뉴스타파 2014.01.16.) 이처럼 앞으로도 보건의료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적 방식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공익적 가치를 지켜줄 합리적인 방식인지에 대해 우려가 많다. 만약 지금처럼 과거의 방식대로 이 산업분야에 접근한다면, 재벌은 돈 되는 의료산업에서 수익을 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화 된 방식의 정부보조금으로 근근이 지탱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투자자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고, 기본적으로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적 가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면, 현재 가계부채의 위기를 개인의 위기로 보는가 아니면 사회재생산의 위기로 보는가에 따라 처방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의 위기로 보았고, 도덕적 절제, 합리적인 재무관리, 채무조정, 개인구제 및 파산관리 등으로 접근했었다. 그래서 대선공약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었던 국민행복기금도 실제 이 틀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사회재생산의 위기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던지고자 한다. 이것은 세계경제와도 관련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치솟는 불평등지수는 사회통합력을 붕괴시키고 있다. 인종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아비규환의 중동, 통합유럽의 분열 등등, 이런 현상들의 기저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드리워진 세계경제전망의 어두운 그림자와 불평등이 있다. 한국은 이런 위기와 갈등이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대한 가계부채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위기를 개인의 위기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7년 넘게 내수부양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가계는 이제 자신을 재생산시킬 동력을 완전히 소진했다. 재벌들에게 이 상황을 반전시켜주길 고대하고 있지만 기약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이제 이 위기를 타개할 적극적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 적극적인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가계부채로 인해 재생산체계가 붕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필요가 절실하고 재생산체계의 토대가 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으로서의 적극적인 사회화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마이너스세대 출현과 모라토리엄의 그림자

토론문 :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0. 들어가며

앞서 발제해주신 내용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 뜻을 함께한다. 앞서 거론해주신 내용 중 재생산의 위기 중 청년문제, 부채에 대해 조금 더 짚어 보고자한다.

## 1.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어떠한 존재인가?

청년실신, 민달팽이세대 등등 청년을 거론하는 담론도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거 선배세대들이 누렸던 기회는 사라지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리기엔 녹록치 않는 상황이 오고 말았다. 최근 청년이 이슈가 되어 정치권에서도 많이 호명되는 있는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쓰여지는’ 존재로 호명될 뿐 청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재단하기 바쁘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과 배당등의 논쟁을 보더라도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 2. 일자리만 늘리면 청년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많은 정책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올 초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섰고, 체감실업률은 20%가 넘는다. 또한 고용의 질은 더욱 나빠져 불안정 일자리를 반복하는 청년들이 줄지 않고 있다. 이제는 고용의 양이 아니라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새롭게 거론 되고 있는 ‘사회밖청년’ 즉 니트 및 비구직 니트가 4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sup>25)</sup> 이는 구직을 해도 정상적인 미래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채념, 단념해 버리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 3. 삶의 고비용 구조의 트립과 빈곤

앞서 발제문에서도 거론했던 것처럼 청년층 불안정한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0명 중 7명이 주거비로 30%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1인 가구 청년층의 주거빈곤율이 36%를 넘어섰다.<sup>26)</sup>

---

25) 출처 : 한겨레, 청년빈곤의 미로에 갇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0139.html](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0139.html)

26) 출처 : 서울시 ‘2015년 서울 청년은, 지금’ 재인용

#### 4.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청년

앞서 저임금, 고비용구조에 놓여 있는 청년층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커녕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11년 전체자산 비중 중 1.1% 였던 것이 2014년 0.7%로 4년 사이 0.4%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청년은 당연히 미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구주 연령별 자산비중 현황〉

구 분		평 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차
전 체		100.0	100.0	100.0	100.0	-
가구주 연령대별	30세미만	1.1	1.0	0.9	0.7	-0.2
	30~39세	13.2	13.0	13.1	12.3	-0.5
	40~49세	27.6	27.7	26.7	26.2	-0.1
	50~59세	30.7	30.8	32.0	32.5	0.3
	60세이상	27.4	27.4	27.3	28.4	0.5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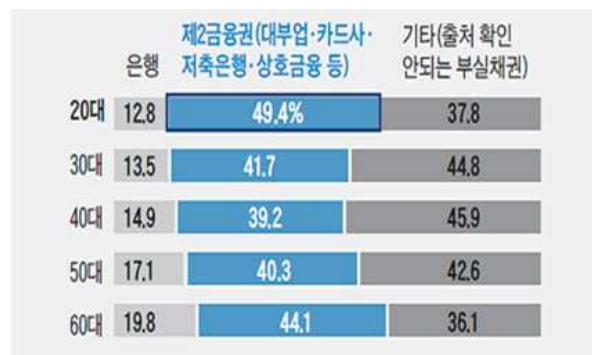
#### 4. 사회안전망 대신 채무노예를 양산

앞서 자료에서 보듯이 청년들은 미래를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생애주기 모든 것에 빚내기를 권장하고 있다.

학자금대출부터 시작하여,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활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대출, 창업자금대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출이 권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발제에도 보여주듯이 청년부채의 크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더 문제는 그 내용의 악성화에 있다.

2014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현황을 보면 20대의 채무종류의 상당부분 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연령대별 채무이용 현황,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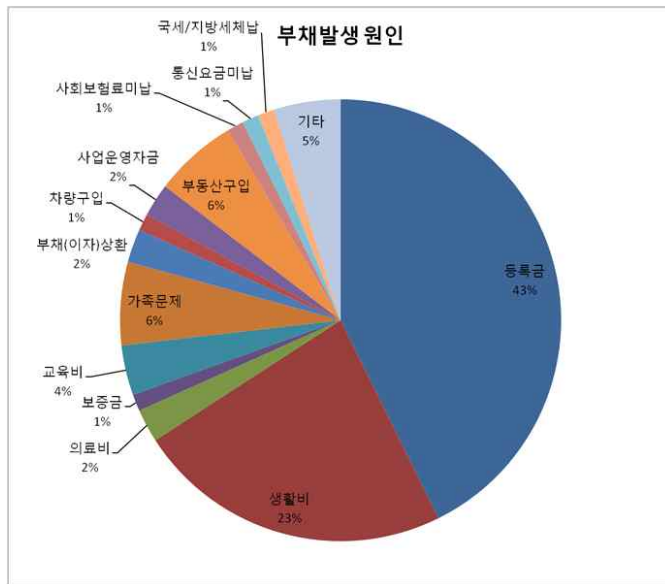


출처 : 채무조정자 23만명 분석, 조선일보, 2014

이는 앞서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빈곤비즈니스의 적용사례라 하겠다. 청년을 빈곤의 나락으로 빠트리는 주범은 정부와 금융회사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5. 청년부채 문제,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 가족부채의 탄생

청년세대의 부채는 부모세대의 몰락과 함께 고스란히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채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학자금, 생계비 다음으로 가족문제로 인한 대출 발생이 늘고 있다.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세대는 세대를 뛰어 넘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다.



출처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2015년  
재무상담 사례조사 53명 분석

7. 청년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청년종합활력지수〉

구 분		패자부활 지수	공정성 지 수	청년협동 지수	사회참여 역량지수	세대 연대지수	세대 자존감지 수
전 체		28.8	20.6	53.6	64.3	42.7	51.6
성 별	남 자	28.3	22.4	55.7	66.3	38.4	53.9
	여 자	29.3	18.7	51.4	62.1	47.4	49.2
연 령	19~24살	31.9	24.4	59.2	65.3	45.9	57.3
	25~29살	27.1	18.2	50.8	64.4	34.9	49.8
	30~34살	26.7	18.4	49.8	63.2	45.5	47.0
부모님의 경제적 지 위	중산층 이상	37.7	26.4	58.7	67.3	43.9	60.5
	중 간 층	32.7	23.6	55.9	64.9	44.2	54.9
	중 하 층	25.8	16.5	52.4	64.5	41.7	48.1
	빈 곤 층	17.2	18.6	45.4	59.1	40.0	44.4

출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5년

최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자존감, 연대, 사회참여, 협동, 공정성, 패자부활 전반에서 사회에 기대하는 것이 없고, 활력을 잃어 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6. 청년부채 문제해결 방안

### 1) 청년층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한 채무탕감 및 채무조정 : “청년층 부채경감 특별법 제정”

: 장기적인 저성장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 이미 발생된 부채는 평생에 걸쳐도 상환할 수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상황을 조기에 털어 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밖 청년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부채문제를 방지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적으로 그릴 수는 없다.

### 2) 초단기 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책

: 통합 도산법을 개정하여 35세 미만의 청년층에게 초단기 회생, 신용회복을 도입하여 조기에 채무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 자산을 형성하게 해야 한다.

### 3) 반값등록금 실현 및 청년층 주거안정 대책 = 저비용구조 만들기

: 근본적인 원인인 등록금 경감과 청년 주거안정 없이는 청년들은 채무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구로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 4) 청년구직수당 및 청년배당 등 구직&사회안전망 정책 추진

: 최근 거론되고 있는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활동지원금 등 구직기 청년을 위한 사회지원정책을 통해 이행기 청년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 5) 청년층 악탈적 대출 방지법

: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0대 청년층 10% 이상 대출 규제 (단계별 이자제한법)

: SNS 대출광고 금지법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과잉대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대출광고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 6) 청년층의 건강한 경제생활을 지원 상담센터 (가칭, 청년생활경제지원상담센터)

: 청년들의 종합적인 신용회복, 채무조정, 자산형성을 도와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각 대학, 고용지원센터 등에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이 필요하다.

## 내수부양의 희생양이 된 ‘푸어족’, 사회재생산을 위한 대안들

정재호교수(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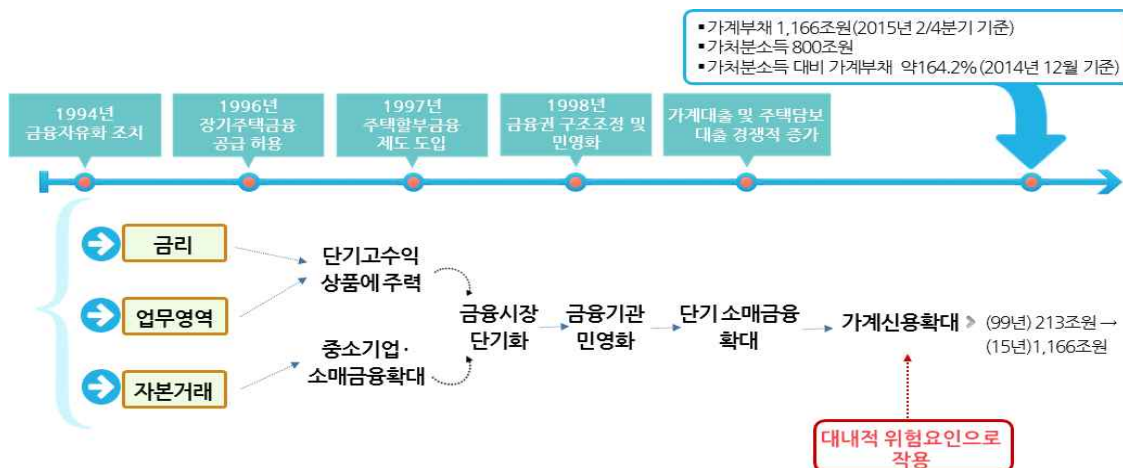
### 1. 금융의 공공성

전통적으로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자금중개기능이다. 국가를 비롯한 기업, 가게 등의 경제 주체는 수입과 지출이라는 예산의 제약 하에서 경제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가게의 경우 자신의 노동력 제공을 통한 대가를 수익으로 하는 흑자 지출단위이고, 기업은 투자에 전념하는 적자 지출단위이다. 금융은 흑자 지출단위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적자 지출단위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금융은 가게와 기업의 자금흐름 또는 지급결제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경제 전체가 참여하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의 이러한 역할적 기능으로 인하여 금융은 경제의 혈액순환경로를 담당하는 공공적 인프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은 다른 산업 또는 기업과 달리 건전성 및 공공성을 강하게 요구받는다. 사기업이 금융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동일인 보유주식의 한도를 설정하여 소유구조를 분산시키고 있으며, 허가제가 아닌 인가제를 통한 설립 등 제도적 감독과 통제를 받는 것도 금융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자문(自問)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 2. 가게부채의 위험

1994년 세계화와 더불어 이루어진 금융자유화 조치로 금리, 업무영역, 자본거래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은행은 단기 고수익 상품에 주력하게 되었고, 대기업이 해외 저금리를 이용하는 자본거래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또는 가게에 대한 소매금융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금융자유화 조치는 선연적 의미였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은 현금보유에

치중하였고, 은행은 구조조정 및 민영화로 인하여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가계대출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2008년 이후 건설·주택경기 부양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책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2015년 현재 가계부채는 1,166조원(2015년 2/4분기 기준)에 달하게 되었으며, 2016년에는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지표는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으로 측정한다. 현재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약160%에 달하며(2014년 말 기준),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84%(2015년 1/4분기 기준)로 계속적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인당 3만 달러의 빛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인당 국민소득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상환비율(원금, 이자 포함)은 11.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개발된 한국은행의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Household Default Risk Index)에 따르면 부실위험이 있는 가구(100을 초과하는 가구)가 1,122,000가구로 조사되었다(한국은행, 2015. 7. 발표). 이는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10,905,000 가구 가운데 약10.3%에 이르는 가구가 부실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리가 1%p 상승하면 부실위험가구가 10만가구 증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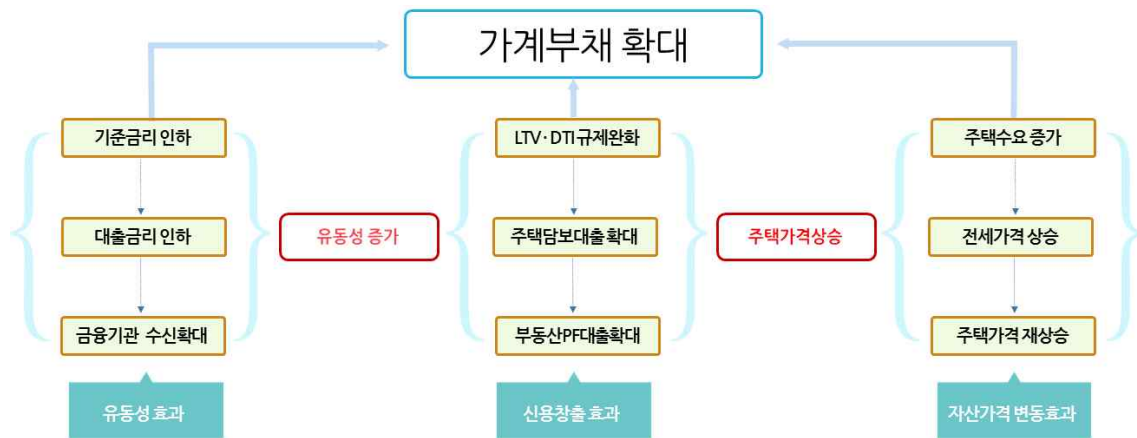
### 3.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가계부채는 크게 통화확대정책에 따른 유동성 효과,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효과, 자산가격의 변동 효과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즉, 저금리 장기화의 통화확대정책은 유동성을 증가시키므로 금융기관은 신용창출의 기회 및 유인을 확대하게 되고, 여기에 부채조달에 의한 주택수요가 확대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 주택가격 상승은 다시 추가적인 가계부채의 확대를 재생산하고, 이는 이차적인 자산가격효과를 되풀이하면서 가계부채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 확대경로에서 정부 정책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 위주의 규제로 부채증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였고, 2007년부터 DTI(Debt-to-Income ratio)규제를 도입하였으나,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강화 또는 완화를 반복하면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2014년 7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① 46조원 이상 확장적 거시정책, ②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③ 주택시장 정상화 등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LTV, DTI를 완화, 즉 주택수요진작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및 가격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히 전달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통화확대정책과 금융기관의 신용확대 유인책은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경제성장을 측면에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택의 과잉공급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한국경제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도입, 상환능력 중심 심사,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의 간접적 억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경기 냉각을 우려한 정부는 당초 방침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가계부채문제 해결이 경제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종합적인 대비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4.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현재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변동효과가 크다는 점은 상술한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2014년과 2015년은 유례없는 주택분양과 청약시장의 성장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청약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청약은 이른바 집단대출의 형태로 총분양금액의 60~70%에 해당하는 중도금에 대한 신용대출이 집행된다. 이러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집단대출은 준공될 때까지 2~3년 동안 중도금 지급시 기마다 단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과 가계대출로 통계에 인식된다. 즉 2015년 역사상 최대의 분양물량로 인해 2016년은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의 급증이 예상된다. 특히 집단대출은 DTI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시점의 가계부채 불확실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은 그 간 주택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주택가격의 하향세가 예상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심리의 감소, 경기침체,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연쇄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월세전환가구의 증가 및 월세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임차가구의 47.8%가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월세의 상승은 주거비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며, 이로 인해 소비심리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저소득 서민층의 21.2%는 생활자금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가계부채부실위험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 5. 가계부채의 대책마련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계부채 억제책은 서민층에게 직접적 악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체질은 개선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에 대한 지원책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전월세 가격상승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전월세 가격통제는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을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재계약 시 전월세를 일시에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계약기간을 최대 3년간 보장하고, 전월세에 대한 투명한 세제를 운영하면 정책실패요인은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다.

둘째, 서민대출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향후 담보가치하락 등으로 기존 대출자의 만기 연장이 곤란할 때에는 성실상환서민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시 차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즉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서민에게는 원금 일부 상환 등의 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저신용·저소득 차입자에 대한 불건전 대출관행, 소위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규제,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 금융소비자보호 강화(5년 미만인 대출에 대한 일괄상환, 미납이자 원금가산 등을 금지 등), 차압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 모기지 은행에 대한 제한적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2010년 6월 시행)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 1분위의 연령별 분포에서 30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확대, 이를 통한 고용창출과 실질임금상승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투자확대로 인한 소득증가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금융 및 주택시장이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이현욱 변호사

## 1. 가계 부채 현황

가. 가계부채는 얼마인가? 가계부채의 규모

가계부채의 국제비교는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개인부문) 총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가계신용이란 금융기관이 가계에 대출해 준 돈(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대금(판매신용)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3. 23. 발표한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sup>27)</sup>(개인부문)의 금융부채가 1,295.0조원에 달하고, 한국은행이 지난 2. 26. 발표한 '2014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014년4/4분기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089.0조원(가계대출은 1,029.3조원, 판매신용은 59.6조원)에 달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GDP(명목)는 1485조 원(2014년 기준)이다(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참조).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간 부채(친인척이나 친구로부터 차용한 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무시할 수 없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4년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평균 5,994만원이고 이중 금융부채는 68.3%(4,095만원), 임대보증금은 31.7%(1,9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근거로 임대보증금 규모를 산정하면 가계대출만 금융부채로 계산하더라도 임대보증금채무의 규모는  $1029.3\text{조 원} \times 31.7/68.3 = 477.7\text{조 원}$ 이 된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477.7조원)를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1,295.0조 원)에 합하면 가계부채의 총 규모는 1772.7조 원이 된다.

---

27)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나.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가? 과다부채 판단 기준

가계부채가 과다한지 여부는 소득, 자산 및 현금흐름 측면에서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채 규모를 소득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고, 부채를 금융자산과 비교하여 실물자산 처분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하며, 부채를 총자산과 비교하여 최종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낸다. 소득 중 원리금상환에 투입되는 비율을 통하여 현금흐름 측면에서의 부채 부담을 파악한다.

국제기구 등은 각 부문의 과다부채를 판정하는 임계치로 대체로 저장(stock) 기준으로는 GDP대비 60~90% 정도, 유량(flow) 기준으로는 소득(수입) 대비 20~30%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가계부채는 GDP 대비 부채잔액이 75%,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20%를 임계치로 제시하였다.

WEF 기준 경제주체별 채무부담 임계치<sup>28)</sup>

구분	가계		기업		정부	
	지표	임계치	지표	임계치	지표	임계치
저량(stock)	부채잔액/ GDP	75	부채잔액/ GDP	80	부채잔액/ GDP	90
유량(flow)	원리금상환액/ 가처분소득	20	원리금상환액/ GDP	25	원리금상환액/ 재정수입	30

체케티(Stephen Cecchetti<sup>29)</sup>) 등은 가계부채의 경우 GDP의 85%, 기업부채는 90%, 정부부채는 85%를 과다부채의 기준이 되는 임계치로 제시<sup>30)</sup>하였고, 라인하트(Carmen Reinhart)와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 교수는 정부부채의 경우 GDP 대비 90%(개도국은 60%) 정도를 임계치로 제시하였다.

28) CEO, 중앙은행, 감독기구 및 학계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9)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

30) 18개 OECD 국가의 1980~2010년 중 자료를 이용, 임계회귀분석(Threshold Regression)을 실시하여 시산

한편 서브프라임 사태 및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7~2008년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6~98%, 기업부채는 75~77% 수준이었고, 주가 및 부동산가격이 급락한 1989~1991년 당시 일본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56~60%, 기업부채는 149~152%, 정부부채는 60% 수준이었다.

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괜찮은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87.2%{1,295조원(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1,485조원} 또는 73.3%{1,089조원(가계신용)/1,485조원}에 달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은 우리나라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 별로 9%~20%<sup>31)</sup>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sup>32)</sup>과 엇비슷한 수준이나 주채무계층인 중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세금 등을 제외하고 저축·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 소득인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14년말 개인 가처분 소득은 788.9조원이고,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1,295조원원으로 개인부문 금융부채 대비 개인 가처분 소득 비율은 164.1%에 달한다.

이렇게 높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2009년 기준의 미국(129.1%)보다도 높고 심지어 금융위기 직전 미국 상황(141%)보다도 심각하다. 또한 미국 외의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는 영국(168%), 호주(155%)와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sup>33)</sup>이다.

## 2. 부채 확대의 경제적 배경

가. 금융자본주의의 특성<sup>34)</sup>

31) 1분위 20.4%, 2분위 14.7%, 3분위 12.0%, 4분위 9.4%, 5분위 9.1% 2010년 각 분위별 중위값 기준

32) 1분위 19.0%, 2분위 17.0%, 3분위 20.3%, 4분위 21.9%, 5분위 15.9% 2007년 각 분위별 중위값 기준

33) 2010.9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한국은행

34) 박양수의 13,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한국은행(2012. 4.)

#### 가) 자금조달과 채무상환의 일상화

현대 금융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소비·투자 등 경제행위를 위한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과 채무상환이 금융시장을 매개로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가계는 소비와 자산매입시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하고 소득과 자본이득 등으로 이를 상환하고<sup>35)</sup>, 기업은 영업자금과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타인 자본을 통해 조달하고 창출한 수익으로 이를 상환하며, 정부는 사회간접투자, 경기변동 및 경제위기 대처, 전쟁수행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세 평활화(tax smoothing) 목적으로 부채(레버리지)를 사용한다.

#### 나) 부채(레버리지) 확대 경향

금융자본주의 아래에서는 경제규모 확대 및 금융심화로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 나. 과다부채의 생성

자산가격 상승이나 경기호황이 지속되면 담보가치 상승, 경제주체들의 위협에 대한 과소평가 경향 등에 기인하여 부채가 크게 확대된다.

일반재화와는 달리 금융자산은 가격이 오르면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로 자산(신용) 수요가 증가하고 담보가치 상승으로 신용공급도 확대된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는 합리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므로<sup>36)</sup> 경제호황 지속시에 위협에 대해 과소평가하며 부채를 적극 확대한다.

금융기관도 저금리기조 장기간 지속, 금융규제 완화, 구제금융에 대한 기대 상승

---

35) 라이프사이클 가설에 따르면 생애 초년에는 소비보다 소득이 적어 부채를 지다가 중년이 되면 소득이 많아지면서 부채를 갚고 저축을 한 다음 노년에는 저축을 사용

36) 행동경제학의 연구결과,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보다는 제한적 합리성에 의해 행동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등의 경우 고위험-고수익 전략을 통해 신용을 적극 공급한다.

개별 경제주체는 소득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低레버리지 상태 --> 차환을 통해 이자상환이 가능한 상태 --> 원리금 상환을 위해 보유 자산 매각이나 신규 차입에 의존이 불가피한 高레버리지 상태의 과정을 거쳐 과다부채가 생성된다.

#### 다. 소비신용의 확대 경향

신용은 그 이용목적에 따라 생산자신용과 소비자신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생산자신용은 금융기관이 생산주체인 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기업 상호간에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고, 소비자신용은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지만 ‘소비자에 대한 신용공여’ 즉, 금융기관·신용판매회사·제조업자·판매업자가 상품이나 용역 또는 화폐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장래에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이를 회수하는 신용제공방법을 말한다. 소비자신용은 통상 직접 금전이 제공되는 소비자금융과 가계의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과 관련되는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소비자신용에 주택금융을 포함시켜 ‘가계신용’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 현상으로서 소비자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물품 및 용역의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대량생산·대량판매 체제의 수립을 위한 요청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대량생산된 상품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 의하여 구입·소비되어야 하는데, 소비자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전뿐만 아니라 장래의 기대수입을 이용하여서까지 상품매출을 확대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소비자신용의 공급자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의 개방화, 자율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제고의 차원에서 점차 소매금융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영업전략을 전환함에 따른 소비자신용 공급이 증가한다. 셋째,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 및 생활수준의 상승, 자극적인 광고에의 노출로 인한 소비지출의 증대를 들 수 있다.

## 라. 가계소득 정체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 아래 세계 각국은 감세, 복지지출 축소 및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의 결과 가계소득증가율이 정체 되게 되었다. 노동유연성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쉽게 해고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복지지출 축소는 실업수당 등 실업 가계에 대한 소득보전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임금이 보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보다 낮은 임금이라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며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사회서비스 감소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성이 대폭 강화되었고, 복지가 빈약한 상태에서 교육비, 주거비 등 필수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 아래 근로자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감세, 복지지출 축소, 노동유연성 확보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중산층, 서민 가계의 소득기반을 악화시켰고, 소득기반이 악화된 중산층, 서민가계는 근로소득이나 정부의 복지정책만으로는 가계의 필수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자산소득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 들게 되었다. 부채경제학의 원리에 따라 자산가격 상승 시에는 레버리지(부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더 큰 자산소득을 안겨주므로 세계 각국의 중산층 가계가 경쟁적으로 주택 투기의 대열에 뛰어 들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3. 가계부채문제 해결 방안

### 가. 과도한 가계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가) 소비 위축

적절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 능력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진작하나, 과도한 부채는 원리금상환부담의 증대로 소비위축을 초래한다. 채무부담 증가-->내수위축-->소득 축소-->채무부담증가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우려 있다.

#### 나) 성장률 하락

소비위축의 당연한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3%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 다) 인적자본 사장

과다한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다. 돈을 벌어서 모두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면, 이는 바로 채무노예에 다름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빚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인적자본이 사장된다.

#### 라) 사회보장 비용 증가

과다한 부채로 인적자본이 사장되면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한다.

### 2) 경제위기 발생 위험 증가

부채가 과다한 상태에서 금리 급등, 경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과 같은 충격 발생 시 금융위기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 등으로 소득 및 자산가치가 급감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면서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경기침체, 외부적 충격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금리 상승 --> 채무부담 증가 --> 자산매각 및 소비지출 축소 --> 가격하락』이 반복되는 부채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수요 둔화로 자산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또는 가격하락 기대가 형성되면) 투기적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위

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점과 위기발생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부동산을 저축의 수단으로 볼 때 순저축 주체인 생산가능인구와 순소비 주체인 고령층 등 여타 인구간 상대적 비율이 하락할 경우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한다.

#### 나.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방안

과다부채는 긴축, 고성장, 채무조정, 정부부채로의 이전, 인플레이션 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할 수 있으나 과다부채 축소과정이 경제위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① 긴축은 경제주체의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부채 증가율을 수년간 성장률 아래로 유지하거나 부채의 절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긴축은 과다부채 문제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대응 방법이지만 긴축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줄고 경기침체로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환능력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
- ② 고성장은 부채를 줄이지 않고 높은 성장을 통해 부채상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수출급증, 전쟁 등 상당한 행운이 따라야 가능한 방법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그 돈이 소비와 투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채 축소에 사용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하며,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가계 신용을 확대하여 성장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부채 문제만 악화시키기도 한다.
- ③ 도산 또는 채무 재조정은 민간·공공부문 경제주체들의 파산을 용인하거나 채권자들의 합의를 통해 부채의 만기, 규모, 금리 등을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이다. 파산이나 채무 재조정은 이를 이용한 경제주체의 신용훼손으로 장기간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
- ④ 정부부채로의 이전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정부가 떠안는 방식이다. 정부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기 어려우며 정부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 ⑤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킴으로써 부채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주

로 정부채무부담을 줄이는데 활용된다. 고인플레이션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외화 유출을 가져와 외환위기 등에 처할 우려가 있다.

위에서 살핀 과다부채 해결 방안을 비교 검토할 때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교적 부작용이 적으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채무조정-즉, 탕감이다. 경제시스템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최대한 탕감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 4.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제안

##### 가. 개인채무자회생 및 도산 특례법 제정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거나 장기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계 부채 축소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므로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계의 과잉채무 해소를 위한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개인의 과잉채무를 해소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자격제한 등의 특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자격제한 사유 또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면책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자격을 제한받거나 등록을 취소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거비에 대한 고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주택 보유여부, 보증금 및 월세의 규모, 거주지역,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동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조세채권에 관한 특례) ①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나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반 파산채권 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법 제624조제1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배당 및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제6조(면책허가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의하여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562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당연복권에 관한 특례)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복권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이 법 시행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나. 공공 임대주택 확대

국가는 가장 우량한 신용주체이고 화폐발행권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같은 금액의 부채를 부담한다고 할 때 가게보다는 국가가 부채를 보유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이다. 한국의 가게부채 총량 중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감소시키려면 가게 아닌 경제주체가 주택을 매수해 주거나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때 가게부채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 주도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지만, 국민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주택 공급을 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주도하되 임대료는 시장가의 80~90% 정도 수준에서 공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자산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야만 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가게 부채를 늘려서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빚내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보다 저렴한 월세를 부담하면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이상 주거 안정을 위하여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 다. 소득주도형 성장정책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것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며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가계소득을 늘리는데 있어서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경제적 효율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철폐, 청년수당 도입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가계부채 해결 방안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

가계부채가 급증해 3분기 말 1166조 원을 넘어 년 말에는 12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가계부채만 증가하였고, 경제의 구조적 위험은 더 커졌다. 우리 경제에 위험한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금융정책, 고용창출과 소득증가, 금융사 대출 책임 강화, 부실채권 선 채무조정 등이 필요하다.

## 1.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가계부채만 증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전세난과 비싼 월세 등의 요인이 주택 수요로 이어져 대출이 증가하였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생계형 대출과 자영업자의 대출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4.2%에 달하고, 한은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가구가 112만여 가구이고 금액은 143조 원에 달하며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지난 6월말 344만 명에 347조원을 넘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알리는 수치가 계속 증가 위험의 도를 넘었다.

가계부채에 의한 경기 부양책이 고용창출과 소득증가 없이는 내수의 버팀목이 되기보다는 빚만 증가하여 금융 안전성을 붕괴시킬 수 있다.

## 2. 기업구조 조정 전이 위험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2014년 12월 말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2만5450여개의 15.2%인 3300개에 달하며 지난11월까지 신용등급이 기업이 58개로 1998년 외환위기 당기 63개에 육박하며 국제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직자들이 대량 발생하고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불똥이 가계부채로 점화될 수 있다.

### 3. 가계부채 해결 방안

가계부채 해결은 경제 환경 변화로 금리가 오르거나 자산가치가 하락하여도 원금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 보다는 원금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부채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 따라서 총량규제와 함께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들이 부채를 어떻게 줄이고 관리하느냐에 있고, 소득이 낮아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용이하게 빚을 갚게 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가. 일관성 있는 금융 정책 추진

경기조절용으로 부동산 금융 즉 LTV, DTI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계 부채가 많고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므로 LTV, DTI 완화 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장기대출은 분할상환이 원칙이다’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 나. 금융사 대출 책임 강화

가계대출은 채권자인 금융사와 채무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계약불이행시 당사자 간의 해결이 원칙이 될 수 있게 대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대출 책임을 물어 부실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 간의 채무조정 등 채무 협상을 하게 해야 한다.

#### 다.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부채 감면

과도한 가계 부채의 부담에 짓눌린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는 생활하기에도 급급하여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고, 금리수준이 높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며 가계부채 부실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채무자의 부채에 대해 채무조정 및 부채 감면이 필요하다.

#### 라. 기업 구조조정 실직자 채무 이자 유예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직된 경우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성격이 있고, 정부는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할 당위성도 있음으로 재취업할 때까지 실직자들의 채무 이자를 유예하거나 감면하여 실직자들의 가계부채 부실화를 차단

해야 한다.

#### 마. 부실채권 선 채무조정

금융사들이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최대 매각예상가격 수준으로도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우선하여 부채상환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사들이 부실채권을 자산유동화 회사나 채권추심회사에 매각되면 거의 평생 동안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그로 인한 비용은 사회가 부담한다. 금융사들의 원금 감면을 포함한 과감한 채무조정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게 하면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유익하다.

#### 바. 소멸시효 경과한 채권 상각할 법적 근거 마련

시효가 경과한 채권은 상각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소멸시효 경과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1원이라도 변제하면 채권이 부활된다. 대부업체들이 시효가 경과한 채권을 상각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효가 경과한 채권을 양도하고 매입하여 추심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 값과 월세를 잡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준공기준)이 2009~2011년에는 21만 2천채이던 것이 2012~2014년에는 12만 1천채로 급감했고,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이 109만채로 전체 주택의 5.5%에 그쳐 전세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 아. 고용 · 소득 증가

가계부채의 근본 해결은 고용과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소득 증가 없이는 부채 상환이 어렵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고용이 증가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복지비용이 서민의 채무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